

“노동시간 단축 단계적 적용”

문 대통령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행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제외 업종 보완조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금 감소와 경영 부담 우려는 있지만 단계적 적용으로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하다고 기대하면서 법정부지원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연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더 많이 일 해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이에게도 엄마 아빠가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라며 “기업에게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껏 경험해 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감소나 경영부담 등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적

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17일 신규채용 및 임금 보전지원, 업종별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 보완해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국민과 기업,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또 단계적인 시행, 지원대책 등을 알리고 노사정이 함께 협력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함

께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도 당부했다. 지난 21일 3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확정됐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추경의 효과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에 마련한 집행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차질 없는 집행에 꼭 필요한 것이 홍보”라며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청년들 그리고 군산 등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추경 내용을 잘 홍보해 수혜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는 추경 집행상황을 총괄 점검해 주고,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업을 긴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

제2 가슴기살균제사태 안돼

김광수 의원, 평화당 라돈대책특위 전문가 간담회

최근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침대에서 검출되며 정부의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민주평화당은 라돈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라돈, 제대로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김광수 의원은 “영유아 36명을 포함해 수십 명이 사망에 이르게 한 가슴기 살균제 사건의 상처가 아직 아물기도 전에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며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침실에서 라돈이 기준치의 최고 9배가량 검출된 것은 정부의 안전관리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번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전 예방·재발 방지를 외치는 정부지만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특히, 생활주변방사선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차 조사에서 안전하다고 발표했지만 2차 조사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발표해 2차 조사를 발표하는 등 아마추어적인 행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며 정부의 일관된 대응을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민주평화당은 선제적으로 라돈 등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출 기준, 정보 공개, 방지 대책 등 국민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라돈특위 구성한 만큼 철저한 실태조사와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 및 안전지침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며 “제2의 가슴기살균제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안전대책 마련에 있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기자



“방탄국회소집 중단하라”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기자간담회에서 송영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방탄국회소집을 비난하고 있다.

임기 마친 정세균 의장 내달 1일 임시회 공고

한국당 요구로… 민주, “권성동 체포 막기 위한 방탄국회” 비난

정세균 국회의장이 29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내달 1일 오후 2시 6월 임시회 집회를 공고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김성태 국회의장 등 111인으로 부터 헌법 47조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5조1항에 따라 다음달 2일 오후 2시 제360회국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헌법 47조1항에 따르면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 따라서 현재 국회 재적의원 288명으로 72명 이상이면 집회 요구가 가능하다. 113명인 한국당 의석수로 충분히 소집이 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후반기 원구성,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드루킹 여론조사 사건 관련 현안 등의 처리를 위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라고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게다가 정 의장의 임기가 이날로 종료돼 의장단 부재로 사실상 본회의 개최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뉴스

“비수 같은 위험성 품은 기사”… 靑, 조선일보 비판

“대단히 엄중한 시절… 기사 한 꼭지가 미치는 파장 커” “상대가 北 아닌 다른 나라였으면 외교문제 휘말렸을 것”

청와대는 29일 최근 남북미 상황을 둘러싼 조선일보와 TV조선의 기사들을 거론하며 “앞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자신 명의의 논평을 통해 “대단히 엄중한 시절이다. 기사 한 꼭지가 미치는 파장이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는 지금 하늘이 내려준 기회를 맞고 있다. 하지만 바람 앞의 등불처럼 아슬아슬한 것도 사실”이라며 “일부 언론보도가 그 위태로움을 키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최근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가 심각하다”며 관련 기사 3건의 제목을 나열한 뒤,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수 같은 위험성을 품고 있는 기사들”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 끝난 날, 국정원 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5월28일·조선일보)’, ‘풍계리 경도 폭파 안해… 연막탄 퍼온 흔적 발견(5월24일·TV조선)’, ‘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1만달러 요구(TV조선·5월19일)’ 등 3건을 문제삼아 기사로 예를 들었다.

김 대변인은 조선일보와 TV조선이 북한을 폄하하려는 의도성을 갖고 사실과 다른 오보를 기사화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보도대로라면 북한은 상종하지 못할 존재다.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거액을 뜯어내는 나라가 돼버리고 만다”며 “만약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이런 방식으로 묘사했다면 당사 법조·외교직 문제가 휘말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보도는 한 차레에 그치지 않고 후속 오보를 낳기 마련”이라며 “여의도의 정쟁은 격화되고 국민들 사이에 파인 풀은 더 깊어진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우리 언론에게 북한은 ‘사실 보도’라는 기본원칙이 매우 자주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던 보도영역이었다”며 “정보의 특수성 때문에 오보로 확인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거짓임이 드러나더라도 북한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종이라는 유혹 앞에 언론인의 책임감이 무뎠을 경우 너무도 잦았다”며 “이제 이런 보도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현실이 엄중해질수록 그 필요성도 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

권성동 “범죄사실 전부 부인… 검찰, 증거 제시 못해”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저는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검찰은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겨냥해 “법리구성 또한 납득할 수 없다. 앞으로 법원에서 특수단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지 밝힐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과거 지인 10여명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미 2차례에 걸쳐 강원랜드 수사를 하였으나, 아무런 혐의조차 없었다”며 “본부장이나 사장에게 교육생 채용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이어 “특수단의 범죄사실 구성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

고창군
GOCHANG COUNTY

자연과 사람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세계 최고의
자연생태도시, **고창군**

고창운곡람사르습지